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음 3월 25일) 제17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지 호소하는 유승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통 풍남문광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3월 전복수출, 대중국 수출 크게 증가

사드 여파 뛰어넘었다

전년보다 44.6% ↑ ... 품목별로 자동차 1위 자리 복귀

올 3월 도내 수출이 조선업계 충격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중국 수출은 올 들어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7년 3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수출은 5억5,314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7.8% 감소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3월 선박과 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수출 9,300만 달러의 기여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도내 총 수출 금액은 9.1% 성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드배치 여파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보다 44.6%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도내 수출의 1위 품목은 자동차가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에서도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걱정했던 자동차

수출은 3월 성장세로 반전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만에 1위 자리에 복귀했다. 또한 3월 농기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무역통계 품목분류가 일부 변경되면서 '농업용 트랙터'가 자동차에서 농기계로 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보면 올 1월부터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중국 수출이 3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44.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합성수지(65.7%), 동계 제품(132.3%), 건설생산기계(1523.2%)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으며, 이밖에 비누,치약 및 화장품 등을 제외한 수출 20위 이내 대부분의 제품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 강도가 거세지면서 이달부터 대중수출 타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편 화물자동차(319.7%)의 선전이 눈에 띄는 베트남(126.3%), 버스(1,700만달러) 수출 개시에 따른 투르크메니스탄 등지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고 무역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이 올 들어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만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체가 관련하고 있는 화장품의 수출이 유독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최근 비관세장벽을 날로 강화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보다 수월하게 넘을 수 있도록 '지역 차이나이스크'에 상주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한-중 FTA 활용 등 중국 진출과 관련한 전문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줄여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정부에 저감 대책 마련 촉구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 심각성이 대두되자 환경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을 절반으로 줄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북 미세먼지는 연평균 50 $\mu\text{g}/\text{m}^3$ 이다. 이는 인천과 경기, 충북에 이어 광역단체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전 세계 사망자 8명 중 1명에 해당하는 700만명이 공기 오염으로 목숨을 잃었다"라며 "호흡기와 심혈관계질환, 뇌질환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시설과 계층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스럽다"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패턴을 예측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관련 기관에 ▲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기준 잠점목표 3단계'로 관리 기준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 석탄발전소 축소와 신규 계획 중단 ▲ 자동차 수요 관리 정책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올 들어 도내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총 6번 발령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오염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일 때 발령된다. /김민근 기자

“토·일 신문 쉽다.”
매일 INDEX
3면 - 문재인, 장애인 공약 발표
4면 - 장수 금천마을 안전망 강화

5·9 촛불대선 D-18 대선후보들, 청년실업 해소책 제시

'취업절벽' 극복한다

19대 대통령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후보들이 '취업절벽' 시대를 극복할 청년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서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한시적 특단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20-30대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문 후보는 우선 청년고용 의무화 단계 확대를 약속했다.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의무(1000명 이상의 경우 5%)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약속했다. 3년 한시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 활동을 한 경우 매달 30만 원씩 9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 역시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과 구직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5년 한시의 청년고용보장계획을 공약했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 수준을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안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또 청년 실업안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고용보장계획에는 구직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문 후보와

후보자별 청년일자리 대책

문재인,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 고용비율 5%로 '고용 의무화' 확대
취업준비생 구직 수당 지급

안철수, 5년 한시 고용보장
중기 취업하면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 지원

심상정, 35세 미만 실업자 중
고용보험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 절반 지급제 도입

홍준표·유승민, 민간서
일자리 만들어 청년 실업 해결

구체적 지원 '불투명'

문재인 "정부 예산 자연
증가분 통해 해소 가능"

안철수 "매년 17조원 되는
정부 일자리 예산 조정"

심상정 "사회복지제 도입
법안세 인상 등을 재원화해야"

홍준표·유승민,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에 수반되는
예산문제 제시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약속했다.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기업에는 5% 이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한시 규정은 없다. 또 15~35세 실업자 중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는 청년실업보조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수적 경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민간에서 일자

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한다는 정책을 내놴다.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 창출을 약속한 홍 후보는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기술창업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합리적인 노동 관행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은 구조 조정하고 여기서 줄인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 역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약 포커스를 뒀다. 구체적으로 혁신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한 대기업의 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 임금 인상 등이다.

다만 홍 후보와 달리 유 후보는 경찰 등 행정공무원 단계적 확충, 한시적인 청년실업 보조 도입 등도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선 공약 시행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후보는 청년 실업문제를 포함해 일자리 대책의 재원 문제를 정부 예산 자연 증가분(매년 16조~17조 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의 경우 매년 17조 원 정도 되는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서 청년고용보장 계획 시행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제 도입과 법인세 인상 등을 재원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선 공약이 청년 실업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조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재용 기자